

재 창 간 호
통권 11 호
2019. 9. 26.

기사연 리포트

재창간호

원장칼럼 · 2

기사연 40주년, 변화의 작은 몸짓을 시작하며 · 4

기사연 리포트의 의미를 되새기며 · 12

일본의 역사·사회 교과서 속에 그려진 한국 · 16

일본 기독교인들의 한국 역사 이해 · 45

관련 자료 소개 · 63

기사연 소식 · 6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위기를 기회로

김영주 (기사연 원장)

최근 일본은 수출규제조치를 앞세워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 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한국 측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1965년 박정희 군사정부는 한국 사회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던 불의한 군사정권이 폭력을 자행한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한일관계는 심각한 왜곡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한국 경제는 일본 예속화가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왜곡과 경제적 예속의 역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이다. 일본은 지난 한·일간의 역사에 대한 반성 및 수정 없이 경제력을 앞세워 역사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도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한, 일간의 경제 문제를 더욱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 역사적,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협정(GISOMIA)을 종료하고 독도방위훈련을 실시하자,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역사는 일본 중심의 역사였다. 가쓰라-대프트 밀약 (1905년 7월 29일)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 (1951년 9월 4일)에서의 한국 배제 등이 그 증거이다. 한국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사드 배치 기지 제공 등 많은 부담을 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용산 미군기지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는 무례하기 짹이 없어 보인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이 한반도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순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핑계로 군사독재정권의 뒷받침 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안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아직까지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일본에 예속되어 있고,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각각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있는 문제의식을 일깨워주었다. 역설적으로 일본은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이에 한국인들은 그 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친일세력과 일제 잔재의 청산의 시급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명백히 드러났고, 한국인들은 미국이 순수한 우방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올해는 우리 조상들이 기미독립선언을 한 지 백 년이 되는 해이다. 백 년 전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민족 독립 국가의 꿈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으로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경제적, 군사적 자립이 어렵고, 분단된 나라의 통일도 여전히 난제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본과 미국은 아직까지 그 역사적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라 말하고 싶다. 촛불 혁명을 통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한국인들의 헌신과 분투에 큰 기대를 한다. 우리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극일(克日), 극미(克美)의 행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당부가 생각난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어른들은 오늘의 싸움을 이기십시오”



기사연 40주년, 변화의 작은 몸짓을 시작하며

김 상 덕 (기사연 연구실장)

광장에 선 기독교

올해로 3.1 운동 100 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근현대사는 격동적 사회변화를 감안하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떠한 사회의 담론과 집단의식이라는 것이 형성될 여유조차 주지 못했던 한국사회는 이제 ‘이후의’ 사회의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제도나 시스템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겨워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대 간의 차이 역시 한국사회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사회 갈등의 현상 가운데 한국교회는 과연 ‘이후의’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공적 역할에 대한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보입니다. 특별히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양상은 선동적인 구호와 ‘가짜뉴스’로 점철된 정쟁(政爭)의 장으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상생의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대상을 ‘타자화’(他者化)하여 혐오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사연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세 가지 공론장으로서의 공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공론장: 광장, 도시, 그리고 미디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공간은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광장’(plaza)입니다. 특별히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광화문은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난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는 ‘독재타도’를 외치는 민주화운동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었던 시절 87년형 민주화운동 속에서 기독교는 민중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2017년 광화문에서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것처럼 기독교도 나뉘어진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하나의 기독교적 정치사회운동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광화문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민주화운동 이후의 기독교 사회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도시(city/urban space)입니다. 도시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화된 삶의 방식의 집약체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은 도시화되었다고 할 때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적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가?’입니다. 찰스 테일러가 바르게 지적하듯 현대인의 불안과 염려는 도시의 자기-중심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며 타자에겐 무관심하고 스스로는 고립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공동체,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의 조합은 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매일의 일상으로부터 거대한 체제에 이르기까지 상호 긴장 가운데 갈등하며 부딪힙니다. 과연 대다수의 교회가 도시에 기반을 둔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도시의 경제학을 넘어 공동체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도시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공간은 바로 미디어(the media)입니다. 언론과 미디어, 특별히 뉴미디어 사회 속 가상의 세계(cyber space)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의 미디어 공간의 등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개인 및 집단의 의식체계와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풀려진 현상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성찰은 부족해 보입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각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있어도,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줄이면서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상 세 공간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공론장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향후 기사연의 연구 분야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사연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들 가운데서 1) 사회갈등(social conflict), 2) 도시정의(urban justice), 그리고 3) 미디어문화(media culture)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강연, 그리고 소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사연 40 주년, 작은 변화의 몸짓들

올해로 기사연은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축하보다는 반성과 성찰의 필요를 통감합니다. 누구도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사연은 작지만 의미 있는 몸짓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연 리포트>를 재창간합니다. 과거 <기사연 리포트>는 기독교적 사회운동의 담론 형성을 가능케 하던 소통의 창구였습니다.¹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기사연 리포트>를 통하여 국내외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을

1 과거 <기사연 리포트>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는 본호 이민형 연구원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용하고,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공론장 형성과 속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연구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사연 리포트> 재창간호에서는 최근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일본 교과서 속 역사인식의 문제를 분석한 “일본의 역사·사회 교과서 속에 그려진 한국”(홍이표)이라는 글과 실제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인식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일본 기독교인들의 한국 역사 이해”(유시경)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사연 리포트>를 통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감정적인 논쟁에서 좀 더 깊은 논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연의 두 번째 변화는 기독교 및 시민단체를 위한 공론장 형성과 공적 역할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입니다. 현재 기사연은 <201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개신교인 1,000 명, 비개신교인 1,000 명의 사회인식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개신교인의 신앙 및 정치, 경제, 사회, 통일,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개신교인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의 몸짓은 대중과의 소통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부터 시작되는 <기사연 포럼>과 <기사연 아카데미>을 통하여 한국 사회 속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대화와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² 먼저, 오는 9 월 <기사연포럼>에서는 이병성 박사(연세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를 초청하여 “민주화 이후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민중인가, 시민인가?”라는 주제로 기독교 사회운동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11 월 <기사연포럼>의 주제는 “미디어와 도시: 기독교적 성찰”입니다. 뉴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도시와 공동체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2 자세한 행사 개요는 이 글 마지막에 첨부하였습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용찬 교수가 발제를 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박진규 교수의 논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0 월에는 <도시공동체연구소>와 함께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가집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 속에서 공공신학의 흐름과 한국적 적용의 의미를 논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의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조강연을 맡은 김창환 교수(풀러신학교)는 지난 2006 년부터 2017 년까지 <국제공공신학저널>(JPT)의 초대편집장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A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SCM Press 2011),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Brill 2017)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연 아카데미>는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배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병성 박사(연세대 기독교문화연구소)가 이끄는 “현대 정치철학 세미나: 광장과 기독교” 주제로 현대의 중요한 서구 사상가 중 네 학자(하버마스, 알찌, 샌델, 테일러)의 글을 읽고, 한국 시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강좌입니다. 두 번째 강좌는 김승환 박사와 함께 하는 “공공신학 세미나: 도시와 신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도시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동시에, 도시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사연의 변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기사연의 작은 변화의 몸짓들에 주목해주십시오. 기사연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사회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성실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독교 담론 형성을 위한 <기사연 리포트>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연 포럼>과 <기사연 아카데미>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읽어내고 분석하며 교회의 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사연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기사연포럼 “민주화 이후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민중인가, 시민인가?”

- 일 시: 2019. 9. 26 (목) 오후 7 시
- 장 소: 기사연 이제홀
- 발 제: 이병성 박사 (연세대 기독교문화연구소),
- 논 찬: 이상철 박사 (크리스챤아카데미)

2. 공동포럼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을 논(論)하다”

- 공동주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x 도시공동체연구소
- 일 시: 2019. 10. 17 (목) 오후 4 시~6 시
- 장 소: 기독교회관 조예홀
- 강 연: 김창환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패 널: 성석환 교수 (장신대학교), 김근주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3. 기사연포럼 “미디어와 도시: 기독교적 성찰”

- 일 시: 2019. 11. 14 (목) 저녁 7 시
- 장 소: 기사연 이제홀
- 발 제: 김용찬 교수 (연세대학교)
- 논 찬: 박진규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4. 기사연 아카데미 1 - “현대 정치철학 세미나: 광장과 기독교”

- 일 시: 10 월 4 ~ 25 일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 장 소: 기사연 이제홀
- 대 상: 목회자 및 신학생, 관심자 누구나
- 수강료: 전체 3 만원 (부분 수강 가능. 1 주에 1 만원)
- 강 사: 이병성 박사 (연세대 기독교문화연구소)
- 세부일정

	강의 주제	참고서적
1 주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포스트 세속”과 기독교	위르겐 하버마스, 요제프 라칭거 공저, 윤종석 옮김, 『대화: 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경』 (새물결출판사, 2009)
2 주	マイ클 월저 Michael Walzer: 하나님의 정치공동체	マイ클 월저, 이국운 옮김, 『출애굽과 혁명』 (대장간, 2017)
3 주	マイ클 샌델 Michael Sandel: 공화주의와 기독교	マイ클 샌델, 안규남 옮김, 『민주주의의 불만: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 (동녘, 2012)
4 주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세속시대”와 기독교	찰스 테일러, 김선욱 외 옮김, 『세속화와 현대문명』 (철학과현실사, 2003)

5. 기사연 아카데미 2 - “공공신학 세미나: 도시와 신학”

- 일 시: 10 월 14 일 ~ 11 월 4 일 (매주 월요일 오후 5 시)
- 장 소: 기사연 이제홀
- 대 상: 목회자 및 신학생, 관심자 누구나
- 수강료: 전체 3 만원 (부분 수강 가능. 1 주에 1 만원)

- 강 사: 김승환 박사 (장신대학교)
- 세부일정

	강의 주제	참고서적
1주	세속화와 근현대도시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2주	도시, 공공성, 그리고 교회	일라인 그래함, <i>What makes a Good City</i> , Darton, Longman and Todd Ltd, 2009.
3주	도시의 영적 형성	제임스 K.A. 스미스 「급진 정통주의 신학」 7장 (CLC, 2011)
4주	하나님의 도시를 향하여	필립 셀드레이크 「도시의 영성」 (IVP, 2018)



〈기사연 리포트〉,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¹

이민형 (기사연 연구원)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고 날씨가 맑겠구나’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 16:2-3)

1979년 2월 21일, 한국기독교산업문제연구원과 한국기독교학술원이 통합되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하 기사연)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기사연의

¹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 (Voice of the Voiceless)”는 살바도로의 대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수식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교파 간의 연대를 종용하고,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기사연이 실천해온 다양한 활동들은 교파와 신앙고백의 차이를 넘어, 지구적이면서도 지역적인 일치와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제반문제들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담은 사회의 건설”이라는 구호는 기사연이 제시하는 사회적 해결방안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정신과 활동 목적을 근거로 한 기사연의 주요 활동은 한국 내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 배포하여 한국 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종용하는 것과 지역공동체를 향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함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다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연의 주요 소통 통로였던 여러 출판물 중 <기사연 리포트>는 기사연의 정신과 목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연구서였습니다. 1987년 6월 11일 발행된 첫 번째 리포트의 머리말은 위에 적힌 마태복음 16장 2-3절로 시작합니다. 이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선한 세력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고, 합심해서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 <기사연 리포트>의 기획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발간된 <기사연 리포트>는 “사회의 제반 정세동향에 관한 기초정보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 한국 사회의 면면에서 일어난 문제들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나 언론과 여론의 통제가 극심했던 1980년대의 한국 사회를 상상해 볼 때, 고통스러운 현실에 시름하는 이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분야의 다양한 흐름을 정의, 평화, 생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 속의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행동이었고, 진정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자처한, 당시에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계 출판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연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군부정권의 종식과 민주 사회로의 진일보를 위해 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조사, 보고하는 형식의 “특집” (정치 동향), 학생, 농민, 빈민, 노동자 등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민족민주운동” (운동권 동향), 세계와 한국의 경제 상황과 그 여파에 대해 분석한 “경제 동향,” 그리고 급격하고도 혼잡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계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특집”으로 실린 글들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 정보 공유 기술의 부족, 정부의 감시와 통제, 시민들의 분산된 관심 등 - 을 고려했을 때, 기독교적 사회 책임감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꺼내기조차 힘들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연대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사연 리포트>를 발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기사연 리포트>는 약 2년간 총 10권의 발간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기독교적 시각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동향을 읽어내려는 기사연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맥락으로 출판된 <기사연 무크지>, <기사연 시사논평>, <기사연 정치논단> 등은 한국 사회, 특히나 한국 기독교계에서 기사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년대 말부터 민주사회의 발전, 시민 역할의 강화, 비기독교 NGO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기사연을 포함한 여러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의제가 사라진 후, 세분화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인력과 자본은 분산되었고, 자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강화된 교회는 상당수가 사회운동보다는 교회나 교단의 일에 치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이라는 분명한 구분선이 존재했고, 각 진영에 속한 이들이 갈등과 화해를 통해 일정한 주제에 대한 신학적 공론을 만들어냈지만, 진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활동가들 간의 연대가 어려워지면서, 기사연을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사연은 <기사연 리포트>의 발간을 재개합니다.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 넓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사안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단과 교리에 얹매여 운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기에 <기사연 리포트>의 재창간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갈등 (social conflict),” “도시(공간)정의 (urban justice),” “미디어문화 (media culture)”를 주요 관심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각 주제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사회적 조사, 월례 포럼과 아카데미를 통한 공개적 토론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에 전달하고, 동시에 교계의 움직임을 소개하여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적 이상의 실현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제 재창간 될 <기사연 리포트>는 이전과 같이 시대의 징조를 읽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사회 교과서 속에 그려진 한국

홍 이 표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일본 선교사)

1. 들어가며.

2018-2019년은 한일 관계에 특기할 만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노동자의 개인 청구권 소송이 승소로 결정되자, 이듬해(2019) 4월 12일, WTO에서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재판의 한국 측 승소, 그에 이은 7월 1일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발표와 8월 2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또 다시 맞불을 놓은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 그리고 8월 22일 한국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양국 매스컴의 편향된 보도는 양국 국민의 오해와 편견, 감정적 적개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 시민들은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에는 '노 저팬'(No Japan)이라는 구호를 사용했지만, 이후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과의 연대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 아베'(No Abe)로 구호를 바꾸어 맹목적인 '반일 운동'이 아니라, 아베 정권의 그릇된 정책 방향을 규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에 비해 일본의 매스컴은 우익 인사들을 대거 출연시키며 일본 국민들의 혐한(嫌韓), 단한(斷韓)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의 독립과 일본의 퇴거 이후, 70년 이상 한일 무역 수지는 일본이 늘 흑자를 유지해 왔다. 이는 과거 정치적 식민지가 해방 이후에는 경제적 식민지로서의 종속적 관계가 이어져 왔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괄목할만한 성장, 특히 전자 및 반도체 분야의 추월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장기 불황에 빠진 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보수 정권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안겨 그 성장세를 꺾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스포츠는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류 붐을 중심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현상은 그러한 집단 심리를 더욱 자극했을지 모른다. 한국은 늘 정치경제적인 일본의 하부 구조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식이 어리석은 외교정책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공 노동자 문제에 대한 설문을 보면, 반수 가까운 일본 국민은 나름대로 양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81%의 일본 국민이 아베 정부의 조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월 13일 분순(文春) 온라인 설문조사, 반대는 18.7%, 7월 15일 아시히신문 여론조사는 찬성이 56%, 반대가 21%)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에 대한 조사에서는 심지어 98%의 찬성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물론 이것은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 이러한 의식의 기저에는 앞서 말한, 일본이 늘 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강박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짝 치고 올라온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은 그러한 무의식적인 긴장감을 극대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역사 및 사회 교과서 등의 한국에 대한 학습이 그 바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인이 교과서 속에서 접하는 한국에 관한 내용과 첫인상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지난 2019년 4월 12일, 시민단체인 한국환경재단과 일본의 피스보트(Peace Boat)가 양국 국민 550명씩을 초대해 '한일 역사 교과서 비교 모임'을 열었다. '피스&그린보트'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정이 세워졌던 중국 상하이와 원폭 투하지역인 일본 나가사키, 그리고 4.3의 비극이 서린 땅 제주도를 연이어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하나로 크루즈 선상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였다. 이 행사를 주도한 영화감독 야마다 에이지(山田英治) 씨는 ‘한일 교과서 비교모임’을 주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은 서로 다른 교과서로 배우기 때문에 역사 인식이 다릅니다. (...) 일본에서는 3·1운동 등 식민지 국가의 저항 운동을 가볍게 다룬 교과서를 많이들 채택해 가르칩니다. (...) 일본 교과서들은 근대사 부분을 아주 짧게 다루는데요. (...) 한국의 교과서는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알리고 있지만, 일본 교과서는 조선 고유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는 인물을 소개하는 등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마치 자신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처럼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 필요한 일이었을 뿐이지 않나요. 일본은 이런 사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¹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교과서를 읽어 보면서 행사에 참가한 양국 시민과 학생들은 일본 교과서가 일제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한 일본인 참가자는 “일본이 전쟁 이후로 많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일부가 정치권력을 잡아서 이렇게 엉망이 됐다. 이대로 간다면 계속 오해하고, 서로 인식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면서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보았다. 수년 전 한국 사회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던 정부 당국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던 사건이 있었다. 일부 정치세력의 집권 시, 그 퇴행적 정책의 하나로서 ‘교과서’는 손쉽게 악용된다. 어린 학생들의 뇌리 속에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손쉽게 왜곡된 인식과 편견의 노예가 되도록 이끄는 우민화(愚民化)를 획책할 수 있기 때문이다.

¹ “일본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아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13일. ; 「한일 시민단체들 “日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아픔 축소”」, SBS, 2019년 4월 13일.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 및 사회 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 왜 일본에서는 혐한 헤이트 스피치 운동이 끊이지 않으며, 일본 국민의 다수는 지난 무역 규제에도 찬성할 만큼 한국에 대한 멸시나 무시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속의 한국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해답의 한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일본의 역사·사회 교과서 왜곡 과정: 우경화 흐름 속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운동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서술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4월부터 배포될 일본의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의 고대, 근대, 현대사 내용이 왜곡되어 서술된 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 쪽에서 왜곡이 두드러졌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조치로서 3.1 독립 운동을 '폭동'으로 서술하도록 수정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징용징병 등 강제 동원의 인원수를 삭제하거나 축소토록 지시했다. 82년 이전까지는 '침략'(侵略)으로 표현되던 한국강제병합이나 중일전쟁 등에 대해서도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진출'(進出)로 바꾸게 하였으며,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에 이은 각종 내정 장악(경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통수권 등)에 대해서도 '접수'(接收)로, 토지 수탈은 '토지소유권 확인' 등으로,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대한 탄압도 '치안유지 도모'와 같은 미화된 표현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어말살정책을 "조선어와 일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왜곡해 서술했고, 1930년대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도 '신사참배장려' 등의 부드러운 표현으로 서술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중요한 역사 갈등의 요소로 등장한 것은 1982년의 교과서 파동이었다. 1982년 검정 당시 일본 문부성은 검정 전에는 중·일 전쟁에 대하여는 '침략'을 '진출' 또는 '침공'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중국과 한국 정부 및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그 결과 한국 언론은 물론 일본 매스컴에서 조차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관료들은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격분한 한국 쪽의 반일운동은 거세졌고, 관망하던 한국 정부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시정을 요구하며 한일 경제협력회담도 취소했다. 결국 1982년 8월 26일에 곤란해진 일본 정부는 시정하겠다는 각서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윽고 곤란해진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는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이웃 여러 나라들과 우호, 친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이들(중국, 한국)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24일에는 오가와 헤이지(小川平二) 문부대신이 보완조치로서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 즉 ‘근린 제국 조항’을 발표하여 일단 봉합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측이 수긍할만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신경전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 교과서 서술의 퇴행적 현상의 배후에는, 1981년에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결성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있다. 이들은 “자위대법 개정 운동과 교과서 편찬 사업 등에 주력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사상적 조류를 형성해 가려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수정주의적 교과서의 편찬 의지를 천명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서 소개한 1982년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던 것이며, 1986년에는 이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교 일본사 교과서인 『신편 일본사』를 편집, 발행하였다. 이 때 또 다시 한국과 중국 등이 반발하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직접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문부대신에게 수정을 지시하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30항목, 80여 개소를 수정토록 조치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일 양국의 학계나 시민사회는 교과서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의 의도가 좌절된 데 대해 보수 우익 세력의 반발도 거세졌다. 후지오카 노부카스(藤岡信勝)라는 자유주의사관의 대표적 인사는, 1996년 검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술 등에 대해서는 “정정의 신청을 권고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띄우기도 했다. 이후 그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과 함께 ‘새역모’(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발족시켰다. 이 모임은 기존

교과서가 자학사관(自虐史觀)의 산물이라 비난하며 그것을 극복한 '영광스러운 일본'을 부각시킨 교과서의 집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2001년 후소사(扶桑社)가 발행한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한 이향 대립적 비약적 서술 경향을 보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침략 행위를 부정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 한 것도 중국의 불법과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그것을 막아 준 것으로 서술하였다. 대동아 전쟁도 자위전쟁(自衛戰爭)이자 아시아 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문명국으로서의 일본과 열등한 주변 아시아국을 대비시키는 아시아 멸시관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책이 실제로 일본의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이 다시 거세졌고, 일본 국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다.

1980-90년대에는 교과서 문제에 적극 관여해 오던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였지만, 2000년대가 되자 태도를 크게 바꾸어 되는 태도를 크게 바꾸어, '집필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침해할 수 없으며, '근린 제국 조향'에 입각하여 검정한 교과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비판하였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본부'를 설립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역모의 교과서는 2005년, 2008년, 2011년 연속하여 검정을 통과하였고 점유율도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굽어가던 교과서 문제는 한일 갈등의 단골 메뉴가 되었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2012년에는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85종 중 총 39종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되었고, 2013년 3월부터는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의 독도 기술 비율이 계속 증가해 갔다.

3. 일본의 역사·사회 교과서 속에 묘사된 한국

(1) 일본에 대한 한반도 영향력의 은폐·축소: 고대, 중세, 근세를 중심으로

그러면 일본의 역사 및 사회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수년 전 발간된 김종성의 책 『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2015)²는 일본의 교과서가 한국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은폐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물론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가 각각 자국과 한국에 대해 어떤 내용을 누락시키고 있는지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제3장 일본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일본 역사'에서 (1) 한반도에서 문명을 전수받은 고대 일본, (2) 일본 신국 건설과 백제 유민, (3) 쇼군은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았다, (4) 일본이 조선통신사를 환대한 이유, (5) 일본 경제 도약의 밑거름이 된 임진왜란, (6) 오키나와는 1879년까지 독립왕국이었다, (7) 20세기 초 일본 근대화의 비밀, (8) 정당방위로 포장된 일본의 침략 전쟁 등으로 정리돼 있다.

이 가운데, (1) 한반도 불교(문명) 전래사, (2) 백제 도래인 관련, (4) 조선통신사, (5) 임진왜란, (8) 주변국 침략 전쟁 등 다섯 가지 주제는 한국과 관련된 것이다. 앞의 세 가지는 고대 및 중세의 일본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은폐시키는 서술방식이며, 뒤의 두 가지는 일본이 자행한 이웃 국가 한국에 대한 침략 행위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일본 교과서가 누락시켜 숨기고자 하는 역사적 열등감의 폐부를 지적하고 있다.

“야마대국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외부 세력은 에가미 나미오가 인정한 것처럼 천손족으로, 규슈 바로 옆의 한반도와 만주에 자리 잡은 부여나 고구려와 관계있는

² 김종성, 『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서울: 역사의아침, 2015.

세력이었다. 하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한반도나 만주가 아닌 중국 내륙이 일본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 소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야마대국의 성립 과정에 미친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한반도와 만주였다.”³

“일본 입장에서는, 한민족의 도움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한민족과 무턱대고 전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한민족과의 교류에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배를 타고 한반도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한민족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⁴

이처럼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대륙과의 역사적 관련성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역사적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와 관련된 사실은 유난히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할 수 없이 한반도 등 외부세계로부터의 영향을 서술해야 할 때는, 대륙의 영향으로만 축소하여 막연하게 서술하고 마무리 짓는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후쇼사(扶桑社)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신일본 교과서』의 고대사 왜곡을 들 수 있다. 이 교과서는 고대사부터 이미 일본중심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위성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나(任那)라는 논쟁적 용어를 교과서의 소제목에 과감히 사용하였고, 한반도에서 건너 온 도래인도 ‘귀화인’(歸化人)이라는 근대적 용어로 치환해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쪽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본 불교의 한반도 전래사(傳來史)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보 가운데 호류지(법릉사)의 백제관음상을 설명하면서도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 조선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녹나무는 중국과 한국의 남해안 및 제주도 등에도 서식하는 수종이며, 불상의 ‘이름’부터가 6세기 아스카 시대에 열도로 건너간 백제 도래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³ 김종성, 위의 책 「한반도에서 문명을 전수받은 고대 일본」, p.184.

⁴ 김종성, 위의 책 「일본이 조선통신사를 환대한 이유」, p.218.

있으나, 애써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며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하려고 왜곡된 서술을 감행하였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탑인 호류지(법륭사) 오중탑도 백제 목탑의 원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 관련성을 학계는 통설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후소사 교과서는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호류지를 건립한 성덕태자에 대한 백제와의 관련성도 일체 언급하지 않는 등, “조화롭고 아름다운 5층탑이나 금당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배치”임을 내세우며 일본 고유의 전통 문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 전래사를 포괄적으로 서술할 때도 “불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였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의 이론을 연구하고 (...)"라고만 설명하여 한반도 전래설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

김종성의 책 이외에도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가 펴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혜안, 2000)이라는 책도 일본의 교과서 속 한국의 모습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제1부 총론, 제2부 선사, 제3부 고대, 제4부 중세, 제5부 근세, 제6부 근대, 제7부 현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2부 선사시대부터 제5부 근세까지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고대, 중세 등의 한반도 역사 은폐의 사례들은 이 책에서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선사」

한국의 한·일 선사문화 연구와 교과서 서술 / 일본 역사교과서의 원시일한관계사 기술

제3부 「고대」

한국학계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동향 - 임나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 일본의 고대일한관계사 연구동향 /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고대일한관계사

제4부 「중세」

한국의 고려·일본관계사 연구동향 / 한국 고교생의 중세한일관계사 이해 / 일본의

중세일한관계사 연구동향 / 일본 역사교과서의 중세일한관계사 서술

제5부 「근세」

한국의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동향 - 통신사행을 중심으로 / 한국 역사교과서의 근세한일관계사 서술 / 일본의 근세일한관계 연구동향 /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세일한관계 서술 - 한국 교과서와의 비교

중. 근세사에서는 우선 왜구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각 교과서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扶桑社를 포함한 총 4종의 교과서(大阪書籍, 帝國書院, 清水書院)가 왜구에는 일본인 이외에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조선의 국호와 관련해서는 중세의 '조선'을 '조선'이라 칭하지 않고 '이씨조선(李氏朝鮮)'이라 칭한 교과서가 존재하였다(日本文教出版, 扶桑社). 임진왜란에서는 教育出版, 清水書院의 교과서가 침략의 명분을 당시의 조선에서 찾으려 하는 서설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日本文教出版, 扶桑社는 임진 정유왜란을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조선통신사 항목에서는 清水書院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조선통신사를 막부 쇼군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외교 사절로서 묘사하고 있었다. 이렇듯 중. 근세사 부분에서는 각 교과서들 간에 서술상의 차이가 존재할 뿐 어느 특정 교과서만이 한국관련 내용을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2) 근·현대사에서의 쟁점들에 대한 서술 경향

이러한 근대화 이전 시기에 대한 일본의 콤플렉스는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수용하던 역사를 은폐 누락시키는 서술 경향으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메이지유신의 근대화 이후에 형성된 일본의 '우월의식'은 뿌리 깊은 에도 시대까지의 '열등의식'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른다. 일본은 근대화 혹은 문명화를 달성했다는 자만심을 갖자마자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이웃 나라를 '야만'과 '미개'로 멸시하기 시작했고, 무자비한 침략 전쟁은 그러한 전근대성을 계몽하기 위한 불가피성으로 정당화하고 미화했다. 근대화 이후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합리화하면서, 그것은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자 동양 세계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긴 위한 ‘의전’(義戰)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전쟁’이 지닌 ‘야만성’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오류에 불과하며, 그것을 오늘날에도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재정은 논문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 2007년도 검정 합격본의 경우」(2008)에서, “한국인의 민족운동과 이에 대한 일본인의 대응이라는 부분이 아주 소략하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일본사 교과서는 3·1운동에 대해서만 기술할 뿐, 다른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⁵고 분석하고 있다. 무단통치, 3.1운동,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등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살펴본 이 논문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근대사 부분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것은 대부분 ‘침략 전쟁’(청일, 러일), ‘식민지화’(한국병합), ‘독립운동’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2000년대 이후 조금씩 분량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후소사(扶桑社)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쟁 당시의 일본군 승리를 예찬하는 등의 노골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공통된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원인이 일본에 있지 않으며, 상대국이나 전쟁터가 된 조선 등의 약소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일본의 이미지에 불리한 타격을 줄만한 내용은 가급적 교과서에 소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후하다. 예를 들어 정신대 및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도 대표적인 교과서 8종 가운데 4종의 교과서(帝國書院, 教育出版, 日本書籍新社, 清水書院)에서만 한 줄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가 군부대 내에서 성노예로서 착취당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교과서는 한 권도 없다.

⁵ 정재정,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 2007년도 검정 합격본의 경우”, 『한일관계사연구』 제30권. 한일관계사학회, 2008, pp.245-293.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조선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서술은 교육출판(教育出版)과 흐사(扶桑社) 등 일부 교과서가 노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육출판(教育出版)이나 일본서적신사(日本書籍新社), 시미즈서원(清水書院) 등의 교과서는 서구 열강 틈에서 어리둥절해 하는 조선의 모습을 비웃는 풍자화를 게재해 당시 조선의 우매함을 꼬집는 듯한 편집을 시도하고 있다.

앞에서도 소개한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가 펴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혜안, 2000)이라는 책도 제6부 근대, 제7부 현대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침략의 미화와 독립운동 편웨이 사례들은 이 책에서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6부 「근대」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사 연구동향 / 한국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관계사 서술과 수업 - 1860년대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 한국 고등학생이 본 역사교과서의 일제지배정책사 서술/ 일본 학계의 '조선황민화정책' 연구동향 /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일한관계사 기술 / 한국의 역사교육 사례 : 태평양전쟁과 조선인 희생자 문제 / 일본의 역사교육 사례 : 19세기 후반 일본인의 아시아관

제7부 「현대」

한국의 '재일 한인사' 연구동향과 교과서 서술 / 한일 간의 '과거사' 처리와 한국의 역사교과서 서술 - 1965년의 한일조약을 중심으로 - / 한국의 식민지시기 '전시노무동원'에 대한 연구동향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한국인의 인식 / 일본의 현대 일한관계사 서술

(3) 한반도 침략 전쟁 미화와 강제병합의 정당화

： 청일·러일전쟁과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서술 경향

일본 우익 세력이 관여된 '새역모'가 주도해 편집한 후소사(扶桑社) 역사 교과서는 앞서 살펴 본대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매우 노골적이다. 그에 비해 초등학생이 처음 접하는 사회 교과서의 일반적인 서술 경향을 고찰함으로써 평균적인 일본

교과서 속의 한국 이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본에서도 가장 채택률이 높다고 알려진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3종(도쿄서적(東京書籍)의 『새로운 사회』 (新しい社會), 교육출판 및 일본문교출판 발행의 『소학사회』 (小學社會))의 '청일, 러일전쟁 시기와 한국강제병합 시기와 독립운동' 등의 내용을 검토하려 한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세계의 역사를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이다. 이러한 사회과 교과서에 대해 문부성이 발행한 『학습지도요령』(2008)에서 한반도와 대만, 중국대륙 침략의 시작점이기도 했던 '청일, 러일전쟁'에 대해서 "일본제국헌법의 발포, 일청·일러전쟁, 조약개정(條約改正), 과학의 발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나라(일본)의 국력이 충실히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아는 것"⁶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당시 서구 열강과 일본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사례로서 청일 및 러일전쟁을 제시한 것이다. 기준 거대 열강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진 사례로서 특히 백인국가인 러일전쟁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청, 일러전쟁'에 관한 조사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서술돼 있다.

“『일청, 일러전쟁』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청전쟁의 가화조약 체결에 큰 공자가 있는 무츠 무네미츠(奥宗光) 러일전쟁에서 활약한 도고 헤이하치로(郷平八郎)나 강화조약 체결에 큰 공로가 있는 고무라 쥬타로(黒田寿太郎)의 공로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일본)가 냉엄한 국제환경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이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에 의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들 전쟁에서 조선반도 및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준 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⁷

⁶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 2008a, p.27.

⁷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 2008a, p.98.

이처럼 일본의 국익만을 앞세우며 이웃국가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한 인물들을 강조하는 것은, 청일·러일전쟁 등이 자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인식시킬 위험성이 있다. 물론 말미에 인접 국가에 대한 손해의 언급이 조금 언급된다. 가장 채택률이 높은 『新しい社會6上』(東京書籍株式會社, 2014)의 러일전쟁 단원 구성을 보면 실제 학생들이 접하는 내용의 방향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1-11. 세계에 걸음을 내딛은 일본

- (1) 발전해 가는 일본 (114-115)
- (2) 조약개정을 목표로 (116-117)
- (3) 중국, 러시아와 싸우다 (118-119)
- (4) 조선의 식민지화와 세계로 진출한 일본 (120-121)
- (5) 생활 및 사회의 변화

교과서에는 한 프랑스인이 조롱하듯 그린 만평을 게재했는데, ‘일본, 러시아, 중국 삼국이 조선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읽고 이해해 봅시다’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으로서의 당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유도한다. 이후 청일전쟁에 비해 러일전쟁 때의 전사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만큼 자국 청년들의 희생이 컸음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싸움’이라는 삽화에는, ‘여순 전쟁에서 일본군을 이끌었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나, 일본해(한국의 동해)에서의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도고 헤이하치로 등의 군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교과서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메이지 초기에 조선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세력을 넓혀가려 했다. 조선에서는 중국(청)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과 청은 대립이 깊어 갔다. 1894년 조선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일본과 청은 각자의 군대를 조선에 보내, 양국 사이에서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거기다 대만 등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중국 동북부(만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러시아는 일본의 움직임에 간섭을 하고, 일본은 일청전쟁에서 손에 넣었던 영토의 일부를 청에 돌려주게 되었다. 러시아는 또 만주에 군대를 보내, 조선에서도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깊어져 갔고, 1904년에 일러 전쟁이 시작되어 일본은 만주와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일본은 많은 전사자를 냈으면서도, 일본해에서의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도고 헤이하치로 군대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 결과 강화 회담에서 카라후토(樺太, 사할린의 남부)와 만주의 철도 등을 얻고, 한국을 일본의 세력 아래 두는 것을 러시아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전쟁의 비용 부담 등에서 괴로워 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남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한 일본의 승리는 구미제국(歐美諸國)으로부터 일본이 그 힘을 인정받고, 구미의 지배에서 고통 받는 아시아 나라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반면에 일본인 사이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을 압잡아 보는 태도가 점점 확대되었다.”⁸

여기서 한국에 대한 첫 번째 부정적 표현이 등장한다. 즉, 반봉건 반외세를 외쳤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일전쟁 촉발 원인이 마치 조선 내부의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였던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학살로서 진압한 일본군의 무자비한 침략행위를 교묘히 가리는 서술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강화회담에서 철도를 얻고, “한국을 일본의 세력 아래 두는 것을 러시아에게 인정받았다”라는 표현은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거슬릴 것이다.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전혀 관계없는 주변 열강 러시아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정당화 된다는 것을 학생들 의식 속에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침략성은 은폐되고 절차를 거친 합법적 통치로서 교묘히 포장하는 서술이 아닐 수 없다. ‘대동아공영권’ 적인 서구 백인 사회로부터의 아시아 해방이라는 관점이 은근슬쩍 스며들어 있는 서술 양태이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분명 위험한 측면이 있다.

⁸ 『新しい社會6上』, 東京書籍株式會社, 2014, pp.118-119.

‘조선인과 중국인을 얹잡아보는 태도가 생겼다’는 마지막 서술은 마치 일본인의 부정적 측면을 반성적으로 서술한 듯 보이지만, 일본제국의 침략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본 인접 국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부족한 표현에 머물고 있다.

이어서 러일전쟁 승리 직후 진행된 을사늑약(1905)과 한국강제병합(1910)에 대해서는 ‘조선의 식민지화와 세계로 진출한 일본’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동경서적주식회사, 2014, 120)

“일러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10년에 사람들의 저항을 군대로 제압해, 조선을 병합했다. 식민지가 된 조선의 학교에서는 일본어교육을 하고, 조선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조선 사람들의 긍지가 심하게 상처받게 되었다. 그리고 토지제도가 바뀌어 많은 조선 사람들은 토지를 잃고 일본인인 새로운 지주의 소작인이 되었거나, 일을 구하러 일본 등에 이주하거나 하였다. 이런 상황에 반대하여 조선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끈질기고 강하게 이어갔다. 또한 1911년에는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가 조약개정에 성공해, 면세 자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조약을 개정한 일본은 구미제국과 동등한 관계를 쌓기에 이르렀다.”⁹

한국병합은 러일전쟁의 당연한 결과물인 것처럼 서술돼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토지수탈에 대해서도 ‘토지제도가 바뀌어’라는 표현으로 적법한 절차적 변화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고무라의 조약개정을 언급함으로써, 구미제국으로부터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야만적’ 침략행위를 ‘문명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묘사하는 기만적 서술 양태가 아닐 수 없다.

『小學社會6上』(教育出版株式會社, 2014)라는 교과서는 같은 시기에 대하여 “1-9. 근대 국가를 향하여, (1) 로르만톤호 사건과 조약개정 (106-107), (2) 일청, 일러전쟁 (108-109), (3) 일러전쟁 후의 일본과 세계 (110-111), (4) 산업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

⁹ 『新しい社會6上』, 東京書籍株式會社, 2014, p.120.

(112-113), (5) 사회 참의 권리(114)"와 같은 목차로서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시기의 서술을 비교해서 읽어 보자.

"19세기 말에 일본은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하고, 세력을 넓혀 가려고 했다. 이를 위해 조선에서의 지배를 강화하고자 했던 중국(清)과의 대립이 심해져갔다. 1894년 조선에서 국내 개혁과 외국세력의 퇴출을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청이 조선 정부의 요구에 응해 원군을 보내자, 일본도 그것에 대항하여 출병해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청에 승리하고, 대만이나 요동반도를 영토로 하는 것 외에,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얻었다. 또 청에게 조선의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조선에 세력을 넓혀갔다. (...) 일본 국내에서는 만주에서 세력을 넓힌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져,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해져 갔다. 결국 1904년 일러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여순 전투에서 13만 명 병사의 과반수 가까이가 사상(死傷)할 정도로 격렬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해 해전에서는 도고 해이하치로가 지휘한 군대가 러시아의 군대를 격파했다. 그러나 일본은 점차 군대나 물자의 비용을 쓸어 부을 힘이 없어지고, 러시아도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나 양국은 강화를 맺었다."¹⁰

이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불순한 세력에 의한 '반란'(反亂)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의 조선 출병이라는 침략행위를 청의 출병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침략성'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 시기의 수많은 희생을 강조하며 자국 학생들에게 충군애국의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을 유도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청일·러일전쟁보다는 그 후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러전쟁에서는 일청전쟁 때의 4배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었다. 가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는 전쟁터의 남동생을 생각하여, 전쟁에 대한 의문을

¹⁰ 『小學社會6上』, 教育出版株式會社, 2014, pp.108-109.

노래(和歌)로 표현했다. 이처럼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민 대부분은 여순이나 일본해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뻐했다.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이 대국인 러시아에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전쟁 중에 2번이나 세금이 인상되고, 물가도 많이 올라, 국민의 생활은 고통스러워졌다. 러시아와의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카라후토(사할린) 남부와 남만주의 철도와 광산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배상금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생활을 참고 전쟁에 협력했던 국민으로부터는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10년 일본은 조선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토지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져, 그 결과 토지를 잃어 일본인 지주 아래에서 소작인으로 일하거나, 일본이나 만주에 건너가 광산 등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한편, 일본인 사이에서는 조선이나 중국 사람들을 경시하고 차별하는 생각이 퍼져 나갔다. 그 후, 조선 사람들은 독립을 목표로 일어나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운동을 끈질기고 강하게 이어갔다. 또한 1911년, 고무라 쥬타로가 외무대신인 시기에 일본이 수입품에 자유롭게 관세를 붙이는 권리를 확립하여,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달성되었다. 결국 일본은 외국과 대등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점점 더 국력을 충실히 해 갔다.”¹¹

이 교과서도 앞의 ‘도교서적’의 교과서와 구성과 서술 전개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문부성의 검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편집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은 러일전쟁을 곧바로 한국병합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小學社會6上』(日本文教出版株式會社, 2014)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고 있다.

1-8. 국력의 충실을 목표로 한 일본과 국제사회

(1) 대일본제국 헌법과 조약개정

헌법의 공포와 국회개설 /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

¹¹ 『小學社會6上』, 教育出版株式會社, 2014, pp.110-111.

(2) 두 전쟁과 사람들의 삶의 변화

중국 및 러시아와 싸우다 / 일러전쟁 후의 조선 / 일러전쟁 후의 세계 모습 /

근대산업의 발전 / 세계에서 활약한 일본인 /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사람들

(116-127)

일본분교출판(日本文教出版)의 『小學社會6上』(2014)는, 일본이 먼저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되었고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의 두 권과 마찬가지로 도고 헤이하치로의 해전 승리는 반드시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백인 유럽 열강에 맞서 최초로 승리한 러일전쟁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독립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점은 문교출판에서 “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이 대국인 러시아에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서술과 더불어 한국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수용되기 힘든 관점이다.

“19세기가 끝날 즈음, 구미제국은 아시아의 나라들에 진출해, 공장이나 철도 등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일본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조선에서는 경제가 곤란해져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1894년 조선정부가 중국(청)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도 청과의 조약에 근거하여, 군대를 보냈다. 내란이 수습되어 조선 정부는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양국은 들어주지 않고,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전쟁에 승리해 대만과 요동반도를 양도 받음과 동시에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는 등이 강화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 세력을 넓히고자 했던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를 청에게 돌려주도록 일본에게 강하게 강요하고, 일본은 이 요구를 받아 들였다.

일청전쟁 후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으로부터 얻은 배상금 등을 사용해 군비를 증가했고,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억누르고 싶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높았고, 1904년에 일러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승리해 나갔고, 도고 헤이하치로가 지휘한 군함은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다. 그 후 미국의 중개로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 러시아가 조선으로부터 물러나는 등이 결정되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인 유럽 국가인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구미 제국의 진출에 괴로웠던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독립으로의 자각과 희망을 가져다주었다.”¹²

한일 역사학계 공히,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다고 보는 반면, 일본의 초등학생 고학년이 공부하는 ‘사회과 교과서’의 세계사 부분에서는 일본 스스로가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인 불가피한 방어 전쟁이었다고 변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서술 경향 속에서 대표적인 ‘침략’의 현상적 결과였던 한국의 식민지화(병합)에 대해서는, 그 침략성이 은폐되고 오히려 유럽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일본이 대신 방어해주고, 심지어 해방시켜 주었다는 식의 관점을 은근히 주입하고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의 전쟁터로서 만주나 일본해(동해)만이 언급되고 있는데, 러일전쟁은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도 전쟁터로 변했지만,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피해에 대한 서술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의 피해를 은폐하고 오히려 해방시켜주었다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서술 의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러일전쟁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직접적으로 앞당긴 중요한 전쟁이다. 따라서 그 전쟁의 실제적 의미와 그 결과로서의 한국강제병합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는 그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결점과 한계,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러일전쟁이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러일전쟁이 한반도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점도 자세히 설명하여 그 침략성과 불법성을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쟁 당사국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전쟁에 반대하며 중립화를

¹² 『小學社會6上』, 日本文教出版, 2014, pp.120-121.

선언했던 대한제국이었지만, 이는 깡그리 무시되어 일본과 러시아 간에 전쟁이 시작된 점,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기습 선제공격에 의해 촉발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늘 날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점 등을 한일 양국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영토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서술

앞의 ‘정일·러일전쟁 및 한국병합’의 과정은 결국 지금도 한일 간에 가장 예민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독도영유권’의 교과서 서술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나 공민 교과서 정도에서 독도를 영토문제로 슬쩍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국수주의 강조의 중요한 사례로서 독도에 대한 일본고유 영토론의 교육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의 문제제기 수준을 뛰어 넘어 독도를 ‘역사 교육’의 범주로 확대하여 주변적 문제에서 핵심적 문제로 부상시켰음을 의미한다.

즉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더니,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직접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러일전쟁 직후 독도를 현 관할 영토로 편입시킨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조례까지 제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부성이 주도하여 2008년에는 종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언급이 나오더니, 급기야 2014년 4월 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혹은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 소(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 과정에서 합격시켰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다케시마(竹島) 문제”라든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명기되자,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 대신은 이러한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독도’ 문제와 더불어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사라지고, 여러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서술이 증가했다. 현재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 중인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매년 지사 명의로 발송하던 ‘간토 대진 조선인 학살 위령 추도문’ 작성을 거부하며, 그러한 학살의 역사적 근거는 불확실하다며 망언을 3년 째 내뱉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과 여러 잔혹 행위에 대한 부정이 역사교과서를 통해서도 획책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의 침략행위의 책임에 대한 회피를 강화해 가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

김영수는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2013)이라는 논문에서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 독도 관련 역사적 사료만 기술하여 국제법적 논리를 결합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국제법적 논리를 소개해야 한다”¹³면서 보다 현실적인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국제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을 양쪽 모두 강조하며 접근하는 반면, 한국 측은 역사 고유영토론의 교육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서의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순간 한일 관계의 심각한 장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¹³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 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년, pp.243-262.

5. 나가며

교토에서 수년 간 활동한 필자는, 방문객들이 오면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제신(祭神)으로 한 ‘도요쿠니 신사’(豊國神社)로 안내한 적이 많다. 왜냐하면 그 신사 바로 앞에는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조선에서 소금에 절여 가져온 조선 군사와 민중들 수 만 명의 ‘코와 귀’를 묻어 놓은 ‘귀무덤’(미미즈카, 耳塚)가 있기 때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에게 승전의 업적을 입증할 ‘코와 귀’를 가져 오도록 시켰다. 도요토미 사후에도 조선인의 귀와 코는 전리품처럼 그를 모신 신사 앞에 조성된 것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 가면 안내판에 일본어와 한글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 무덤은 16세기 말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진출의 야심을 품고 한반도를 침공한 이른바 「분로쿠·게이초의 역」(한국역사에서는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1592-1598)과 관련된 유적이다. 히데요시 휘하의 무장들은 예로부터 전공의 표식이었던 적군의 목 대신에 조선 군민 남녀의 코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일본에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한 전공품은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이곳에 매장되어 공양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 날까지 전해 내려 오는 ‘귀무덤’(코무덤)의 유래이다. (...)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은 한반도 민중들의 끈질긴 저항에 패퇴함으로서 막을 내렸으나, 전란이 남긴 이 ‘귀무덤’(코무덤)은 전란 하에 입은 조선민중의 수난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교토시, 2003년 3월)”

교토부(京都府)의 교육위원회(우리의 도교육청)는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및 사회 교과서의 ‘우리 지방 역사’라는 항목에서 반드시 이 귀무덤 내용을 소개해 왔다고 한다. 일본이 과거에 범한 침략 전쟁의 잔인한 결과물이 교토 시내에 ‘귀무덤’으로 존재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5-6년 전 ‘귀무덤’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지방 역사’의

항목에서 삭제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과서를 둘러싼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전방위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우익단체’가 깊이 관여한 후소사 교과서와 같은 노골적인 왜곡 교과서 이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침략전쟁과 한국병합 관련 기술들을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내용들 중에도 동학농민혁명을 ‘반란’, ‘내란’으로 표현하거나, 러일전쟁 승리를 아시아 민중들이 모두 기뻐하며 환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병합의 정당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식민지 정책에 거족적으로 저항했던 3.1운동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의 4.19 학생혁명, 광주민주화항쟁, 87년 민주화 운동,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중이 지니고 있는 불의에 대한 항거의 역사적 맥락을, 일본인들은 교과서를 통해 ‘반란·내란·소요·폭동’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의 일본인 다수는 수년 전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무의식을 배양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집단적 운동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편견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

과거에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 언급되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의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식민지기 일본인과 조선인의 일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상호 이해와 연대의 사실을 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재정은 “일본사 교과서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이런 기술이 교과서에도 등장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¹⁴고 말했는데, 그 전망은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¹⁴ 정재정,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 pp.245-293.

김가영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2016)이라는 논문에서, 전범국으로서 과거극복을 훌륭히 했다고 평가되는 독일과 상대적으로 과거극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모습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독일교과서는 생활사·민중사 위주의 서술을 보이고 있고, 일본교과서는 정치사와 지배층 위주의 서술을 주로 하고 있다.

둘째, 독일교과서의 서술은 여러 형태의 전쟁범죄에 대해 기해의 주체와 그 규모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교과서의 경우 그들이 자행한 전쟁범죄의 모습보다는 원자폭탄, 학동의 집단소개(※※), 연합국의 공습 등에 대해서만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자국민의 피해를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셋째, 독일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논쟁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다원적 관점의 활용이다.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사료와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가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학습이 항상 강조되고 있다. 반면 일본교과서의 경우 토론을 요구하는 활동은 거의 없고, 개인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탐구학습의 개수도 현저하게 적다.

넷째,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과거에 대한 대면에 있어서 부정적 과거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부정적 과거 또한 자신들의 역사에 수용하고 있다. 독일의 역사교과서는 과거극복과 전쟁책임에 대해 독일인 전체의 책임임을 나타내는 서술이 강조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모습이 부족하다.¹⁵

일본은 전쟁 피해자로서의 자국 이미지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부각시킴으로서, 확실한 전범국 독일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¹⁵ 김가영,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역사교육연구』 제24호, 한국역사교육학회, 2016, pp.151-211.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이 함께 공동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던 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를 모델로 삼아 「한·중·일」 3국의 역사공동편찬위원회가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대안적 교과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각국의 국수주의 서술 경향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서 편찬 운동이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가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 하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아시아 3국은 여전히 시민단체 차원의 미미한 운동에 불과하므로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교과서 왜곡을 넘어서 일본에서 제작되는 게임에서도 한국 역사를 왜곡한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¹⁶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교과서 및 게임 등의 왜곡을 감시하고 ‘왜곡 교과서 불채택운동’과 ‘역사바로알기’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익세력과 결탁한 일본 정부의 환경 속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중이다. 이들 일본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첨언)

이 글을 마무리하는 오늘(2019년 9월 11일)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이후 9번째로 개각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각은 19명의 각료 중 가장 신임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제외하고 17명의 각료를 대거 교체했다. 이번 내각은 아베 총리가 극우 성향의 최측근들로 포진시켜, 향후 한일 관계와 헌법 개정 및 교과서 문제 등 여러 사안에 있어서 더욱 우경화될 것으로 보인다.

¹⁶ 고병희, “일본 게임에 나타난 한국 역사의 왜곡사례와 대응방안 연구” 『게임&엔터테인먼트논문지』 Vol.2 No.2., 한국콘텐츠학회, 2006, pp.1-8.

눈에 띄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한국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일본 자위대를 총괄하는 방위상으로 옮겼고, 무역 규제를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는 헌법개정을 주도하기 위한 참의원 간사장으로 옮겼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아베가 헌법개정을 통해 군대를 부활시킨 보통국가 전환에 명운을 걸었음을 말해 준다. 38세에 불과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아들은 환경대신에 임명되었다. ‘포스트 아베’ 감으로 불리며 젊은 층은 물론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를 내각에 들여, 헌법개정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심산이다.

재임명 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장관은 과거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때(2014~2017) 현직 각료로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였고,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해서도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일본회의 및 야스쿠니 참배 조직의 맴버로서 올림픽장관에 임명된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일본 국수주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자아낸다.

또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몇 명 있다. 앞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교과서에 등장한 것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대신은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회로 새로 임명됐다. 그는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뒤,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난징(南京) 대학살 등의 내용의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가 향후 헌법개정과 선거대책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점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얼마나 정치와 깊이 관련된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 교과서 편찬을 관장할 문부대신에는 아베의 최측근이자 가장 극심한 우익 인사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이 임명되었다. 그는 2012년 12월 아베 2차 집권 이후 당 총재 특별보좌관으로서 앞서 소개한 시모무라 등과 함께,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 대학살 등의 삭제나 수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을 관장하는 부처이므로 향후 교과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최근까지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전파한 인물로서, 사실상 징용공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한 실세로 거론된다. 그런 인물이 향후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책임지게 될 예정이다. 이들이 주도해 온 교과서 왜곡 활동은 사실 아베 신조 현 총리가, 1990년대에 이미 해 오던 일들이다. 일본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우경화’ 흐름은 반드시 동전의 앞뒤처럼 ‘혐한’과 같은 주변의 열등함을 함께 강조하며 더욱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 ‘교과서’는 그러한 ‘일본의 우월함과 한국의 열등함’을 일본 다음 세대들의 무의식 속에 주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교과서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문답으로 읽는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2001.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2002.
- 고병희, “일본 게임에 나타난 한국 역사의 왜곡사례와 대응방안 연구” 『게임&엔터테인먼트논문지』 제2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pp.1-8.
- 정재정,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된 식민지지배와 민족운동: 2007년도 검정 합격본의 경우”, 『한일관계사연구』 제30권. 한일관계사학회, 2008, pp.245-293.
-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 2008a, p.27.
- 손승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사적전개와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2011.
- 최영호, 『한일 관계의 흐름』, 논형, 2013.
-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평화통일학회, 2013년, pp.243-262.
- 『新しい社會6上』, 東京書籍株式會社, 2014, pp.118-119.
- 『小學社會6上』, 教育出版株式會社, 2014, pp.108-109.
- 『小學社會6上』, 日本文教出版, 2014, pp.120-121.
- 김종성, 『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서울: 역사의아침, 2015.
- 김가영,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역사교육연구』 제24호, 한국역사교육학회, 2016, pp.151-211.
- “일본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아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13일.
- ‘한일 시민단체들 “日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아픔 축소”」, SBS, 2019년 4월 13일.



일본 기독교인들의 한국 역사 이해

유 시 경 (성공회 사제)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제목과 같이 <일본 기독교인들의 한국 역사 이해와 인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선행 조사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별도로 대상화해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묻는 작업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한일 양국 교회가 협력해서 이와 같은 작업도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원고 마감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 일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할만한 여유는 없었기에, 지금까지의 제 일본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일을 중심으로 일부 일본인 기독교인들의 면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지난 6월 13일에 일본 센다이시에 있는 미야기학원여자대학의 초청으로 <2019년도 기독교교육 특별집회>에 강연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를 강사로 추천한 분은 이 대학의 교수로 종교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멘 미즈구(新免貢) 목사입니다. 이 분은 제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동경의 릿쿄대학에서

교목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전국 교목협의회>를 통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신앙과 사역의 선후배로 지내고 있습니다. 강연회를 앞두고 후문으로 들은 이야기는, 강사 선정을 둘러싸고 대학 내에서 일부 반대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소위 반일(反日) 인사를 왜 대학의 중요한 연례 행사로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재학생이 참가하는 특별 집회의 강사로 불렀느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연 당일 대학의 강당에 모인 전체 학생 수는 약 90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반응이 나왔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선은 저를 소개한 약력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위 대학 관계자들의 반응을 유추해보기 위해 강의 흥보지에 실려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봅니다.

미야기학원여자대학/대학원 2019년도 기독교교육 특별집회
(2019년 6월 13일(목) 13:00-14:30, 대학 강당)

강사: 유시경 신부

1963년생, 성공회 사제.

(성공회 약력) 한국성공회 민주화청년협의회 의장, 성공회대학교 기획실장,

릿쿄대학 교목, 서울대성당 사제, 한국성공회 관구 교무원장

(외부활동 약력) 성공회 한일협동위원, 시인 윤동주를 추도하는 릿쿄회 초대 사무국장, 관동대지진 희생자추도회 실행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인권센터 부이사장 역임

(현재) 오사카교구 카와구치그리스도교회 주임사제, (사)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이사 겸 국제위원장, (사)한국라보(LABO) 이사장, 삼일운동100주년민족대표

강연 제목: <정전에서 종전으로 - 조선반도의 통일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구: 마태복음 5: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5:43-44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모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의 일본인들의 경우, 위의 약력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극단적인 혐한 감정을 지닌 일본인이라면 한국 국적의 강사라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고 거부감을 보였겠지만, 소위 말하는 보통의 일본인들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미션스쿨이지만 강의에 온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논크리스챤이기에 평화와 원수 사랑을 말하는 성경 구절도 어쩌면 정말 생소한 것이었으리라 보입니다.

강의 내용 자체가 관동대지진이라든가 삼일독립운동,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 관련한 최근의 북미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욱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통 일본인들의 인식은 정말 기본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관동대지진이나 삼일운동이라는 단어를 접해도 그것이 한국과 또 일본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의 우산 아래 전쟁 패전 후 70년 이상을 근본적인 전후 처리 과정 없이 경제 부흥과 평화헌법의 틀 아래서 말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평화'로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자들은 이런 현상을 헤이와보케(平和ボケ)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전쟁이나 안전보장에 관해 일본을 둘러싼 현상이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분쟁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된다는 환상을 지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만족하고

주변 상황에 아예 무관심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강사 선정에 관여한 미야기학원의 관계자들은 모두 미션스쿨의 교원들이고 대부분이 크리스챤일텐데, 이 분들도 일반적인 일본의 헤이와보케 현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대체로 이러한 일본 사회 일반의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면, 남북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조차 거의 인식이 없기에, 전혀 생소한 말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코이즈미 수상 때에 북한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오랜 봉쇄가 열릴 듯 기대를 모았던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소위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기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의 북한 때리기가 일상화되었고, 북핵 위기, 미사일 위협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면 즉각 일본 전국에 경보음을 울리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법석을 떨면서 전국즉시경보시스템(J-Alert)을 들먹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일본의 기독교계에서는 피납여성 중 사망으로 통보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양친이 독실한 크리스챤이기에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이해와 용서,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여러차례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양친은, 오히려 기독교인이기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테러국가로 지정된 북한과의 관계에 거부감과 의구심을 품고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전국 네트워크의 대표가 되어 지금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젊은 딸의 운명에 대한 진위를 단정하기 힘든 고통을 한편 이해하면서도, 이로 인해 일본 기독교 안에서도 소수 그룹으로 한국과의 선교적 협력과 통일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연대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십자가로 각인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납치 문제가 표면화된 이래 재일교포 금융 기구에 대한 거래 제재, 만경봉호의 입출항 금지, 재일한국조선인 교육기관인 민족 학교에 대한 무상지원 배제 등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던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억압 등이 전국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최근의 혐한 분위기로까지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반도체 3종 부품의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까지 이제는 북한 만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맞물려, 남이건 북이건 조선반도와 일본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강의의 시점은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되기 이전입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이미 일본 사회와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담겨있던 생각들이 보수우익 아베 정부와 집권 세력의 반한/혐한 조장 정책에 반응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멘 교수는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강의로 불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신멘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이 분의 신앙 기조와 기본적인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이번 강의 전에 전교생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과 같은 특별집회 초대와 안내의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2019년 5월 28일
대학종교센터장 미츠구 신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의 디지털컬렉션에는 일본군에 의한 테러 행위를 기록한 문서 <조선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 발발->(Korean Independence

Outbreak Beginning March 1)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교회 소각과 학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이른 아침, 몇 명의 일본 병사가 마을에 들어와서 성인 남성 기독교인들과 천도교 신자들은 통달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도합 23명의 남자들이 무슨일인가 생각하며 명령대로 교회로 향해, 자리에 앉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일본 병사들은 곧바로 교회를 애워싸고 창문으로 총을 쏘았다. 그 대부분은 사살당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초가지붕과 목조 건물에 불이 붙여져, 교회 건물은 바로 불타올랐다. 도망치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총검에 찔려 죽거나 사살당했다. 교회 건물 밖에 있던 6구의 시체는, 제대로 도망치지 못한 이들의 유체였다. 명령을 받고 교회로 향한 남자들의 부인 중 2명은 발포음을 듣고 깜짝 놀라 병사들 틈을 해치면서라도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무참히 살해되었다. 한 명은 19살로 총검에 찔려 죽었고, 40살 넘어 보이는 다른 한 여성은 사살되었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병사들은 마을에 불을 지른 후 그 곳을 떠났다.”

이 사건은 온 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테러행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근대사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우치무라 칸조(内村鑑三, 1861-1930)는 <D.C.벨에게 보낸 서신>(1919년 8월 4일자) 중에, 이 조선인 학살의 대부분을 “악마적 기관”인 “신문의 날조”, 즉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단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삼일독립운동 때에 벌어진 조선인 탄압을 거론하는 것을 <반일사관>이라고 보는 언설 풍조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역사적으로 재검증하는 것은 <반일사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문적 윤리의 책임에 관한 진지한 노력입니다.

위에 언급한 미국측 문서에는 “조선에서의 일본족의 윤리적 불기능 - 일본국 정부와 일본 국민의 책임”(The Moral Failure of Japan in Korea: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Nation)이라 이름붙여진 보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신문기자가 “저 쪽 조선에서는 사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여성, 어린이까지도 일본군에 살해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기사화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신문사에 대해 한국 사정을 가급적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긴급한 요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매스컴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고 사실을 전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는 시민을 무지한 상태로 두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불기능>은 도덕적 힘이 당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견을 이 땅에서 영원히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라고 격조 높게 선언하고 있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전문에 비추어 말하자면, “일본족의 윤리적 불기능”은 일본에게 있어 실로 불영예스러운 말입니다. 이 불명예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향후 일본이 평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외교 정치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상식에 관련된 윤리적 삶의 방식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육의 근본은 지식의 탐구를 통해 세계에 통용되는 윤리적 힘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힘으로 연마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계를 지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2차례에 걸친 북미수뇌회담, 서로 국경을 넘어가며 가진 남북수뇌회담 등에 나타나 있듯이, 최근까지 없었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초대하는 강사 유시경 신부는, 서울대성당 사제, 릿쿄대학 교목을 역임하고, (중략) 1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와구치 그리스도교회(오사카)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영적인 목회를 실천하는 보기 드문 종교인입니다. 유신부님의 강의는 조선반도의 진실한 역사,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 좋은 기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내는 <공동창조의 원리>를 실천할 방법을 찾는 힌트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 글에서 신멘 교수가 삼일운동에 대한 우치무라 칸조의 반응을 소개한 것은, 그가 일본 기독교 초기의 인물중에서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신앙인이고,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기독교사를 논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할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치무라는 1891년에 교사로 재직중이던 동경 제1고등중학교에서 천황의 교육칙어 봉독식 중 천황의 서명에 절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반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것이 소위 “불경사건”으로 일파만파를 일으켜 교사직을 사임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제이, 즉 예수(Jesus)와 일본(Japan)을 생애의 모토로 삼고 일본의 기독교 전도에 일생을 바쳤고, 러일 전쟁 직전의 일본 사회의 군국주의적 흐름 속에서 비전론(非戰論)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사상계에 일본을 넘어서는 시점을 제기하였고, 관념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일본 기독교는 물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치무라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의 사정에 대해 일견 무심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인 것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싸운 대표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에 관한 관점에서는 윤리적 불기능에 빠진 점, 어쩌면 오리엔탈리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치무라의 “불경사건”과 교사 사임은 이후 수년간 “교육종교충돌논쟁”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동경대학 교수였던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는 “기독교가 일본의 국체(國体 = 만세일계의 천황이 일본에 군림하며 천황의 덕이 천양무궁하게 세계에 뻗친다는 메이지 쇼와시기 군국주의 일본의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 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의 교육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친 후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의 논지는 교육칙어가 국가주의, 현세주의로 충효를 윤리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독교는 비국가주의, 탈현세주의로 박애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종교와 국가, 교육에 관한 폭넓은 논쟁으로 전개되었지만 결국 일본의 기독교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メン 교수와 같은 기독교인은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재 일본의 사정입니다. 일본인 중에도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견지하며 일본의 국수주의적 시각을 벗어난 이들이 일부 있지만 아주 극소수인 것처럼, 일본의 기독교인을 놓고 본다면, 더욱 더 소수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2017년까지 전체 인구의 1.1% 였는데, 2019년 들어 1% 미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약 1억 1,500만명 쯤이니 통계상으로는 기독교 인구는 100만명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여전히 두 개의 제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70-80년대에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과정 속에서 늘 문제로 안고 있었던 소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보이는 듯 합니다. 4. 19혁명과 6. 10항쟁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정권의 교체라는 민주주의의 땀과 피를 경험한 한국 사회와 달리, 일본은 일본의 시민사회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채 의회민주주의라 불리는 체재 속에 지내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실상 자기 옷이 아닌 것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점령과 함께 이식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 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본의 식자들이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인 일반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인식의 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신멘 교수와 같이 윤리적 불가능을 염려하며 학문적 윤리 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실천하려는 일본의 기독교인들로부터,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신앙을 지닌 일정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여전히 두 개의 제이 중에서 재팬(Japan)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경우의 사람들이라면, 같은 기독교인일지라도 천양지차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일본 현대사회의 새 출발의 원점인 전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제대로 검증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일본 종교교단의 전쟁책임

저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종교교단들, 그 중에서도 15년 전쟁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에 취했던 교회와 신앙인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군국주의화에 대한 무저항, 전쟁에 대한 묵인과 협력의 책임을 스스로 밝힌 <전쟁책임고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침략전쟁,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 고백의 배경과 과정,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통해 일본 기독교인들의 아시아와 한국 역사 이해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2010년에 결성된 일본의 <오사카 종교인 헌법9조 네크워크>가 이듬해 12월에 발행한 “일본에서의 종교교단의 전쟁 책임”이라는 자료집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와 현상을 적어봅니다.

당시 사무국장이던 타테이시 야스오 씨는 간행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32년 류조호사건(중일전쟁)으로부터 1945년의 태평양 전쟁 패전까지 소위 15년 전쟁 시기에, 일본의 종교 교단들은 너나할 것 없이 전쟁 협력에 매진했습니다. 세속을 상대화하고 절대적 진리 아래 살아가야할 종교인들이 국가 권력에 추종해서 거룩한 교의를 왜곡하고 전쟁을 찬미, 전쟁에 반대하는 성직자를 처벌하고 탄압했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만 할 종교교단이 일본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선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분명 전쟁이 끝난 후 몇몇 교단은 전쟁에 협력한 것을 사죄하고 스스로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평화를 바라며 활동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스스로의 전쟁 협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정당화하려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한 평화헌법을 짓밟고 일본의 재군비나 미국에 대한 전쟁 협력과 참가의 길로 이끄려는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왜 종교단체가 전쟁 협력을 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전쟁 책임을 어떻게 짊어지고, 현실 사회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모든 종교는 “살인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고 엄격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생명을 잃고, 마음에 상처를 입힌 통한에 대한 반성과 세계적 평화 여론의 결실로 만들어진 일본국헌법 제9조를 지키며 살려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잊었던 종교 본래의 입장과 가르침을 복권하는 것이고 종교의 존엄을 되돌리는 실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종교인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군국주의 일본제국의 역사 속에서 보였던 신앙의 굴절과 타협, 패배의 경험이 원죄처럼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죄는 씻으려면 씻을 수 있는 것일텐데, 아직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본인들에게도 이 원죄는 함께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스의 독일이 전쟁의 원죄를 두고두고 사죄하며 새 독일로 거듭나려 노력해오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래도록 뚜껑을 덮어 두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때는 부끄럽고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그 일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한탄과 눈물을 피와 울부짖음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종교, 특히 기독교가 가담하고 조장하고 앞장섰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거듭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타산지것으로 삼아야 할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니시야마 토시히코 신부의 글을 통해 일본 기독교의 단면을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나라에 전쟁책임고백을 한 교단이 있었던가?>

종교는 마음의 문제, 시비선악의 가치관을 키워가기에, 전쟁을 선동하는 일에도, 평화를 일구는 일에도 관여합니다. 살인은 미화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은 발군입니다. 위정자의 정치를 수긍하고, 실제로 일본의 근대화는 정교일치의 결과였습니다.

15년 전쟁의 발단은 1931년의 만주사변, 이 때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것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1932년 봄의 춘계대재 때에 상지대학 학생들이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되어 그 해 가을 10월에 폐교 압박과 박해의 위기에 처합니다. 카톨릭교회는 “신사참배는 애국심과 충성심의 표명만이므로 금지하기 보다는 장려되고 있는 국민의 책무이다”라는 로마로부터의 승인령을 공표함으로 문제 해결, 이후 국가와 종교는 일체가 되어 거룩한 전쟁 수행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온 교회가, 증오와 살육을 미덕이라고 칭찬하고, 전사는 순교, 황국의 거룩한 방패가 된 영령들은 제신(✉✉)이 되어 숭앙받고, 그렇게 숭앙하게 되면 기독교는 이름뿐인 껌데기, 국가의 운명이 절재적인 지고의 가치가 됨으로 신자도 교단도 국가의 종, 살아남는 것을 가능할지라도 마음과 혼을 버린 배교자와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종교의 위대함은 경허함, 즉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고치는 데에 있습니다. 패전을 계기로 자유를 얻은 종교계는 어떠했던지요? 기독교의 대부분은 군국주의로부터 탄압받은 피해자, 전승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온 해방자인것처럼 보인 시류에 올라타서 전쟁책임 고백과는 무관, 무지각으로 일관했습니다.

점령군의 '신도지령(신사에 대한 명령)'을 받아, 카톨릭 교회가 '신사에 대한 공적 사적 참배를 모두 금지'(1946년 5월 10일)하고자 했으나, 1951년에 “종교적이 아니기에 일단 허가한 행위를 미신이라고 금지할 경우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전쟁기의 훈령이 유효하다는 로마의 훈령으로 구태의연한 채로 되고 말았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과 주권재민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배려와, 비록 신앙에

반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완강한 권위주의의 어느 쪽이 진짜 이유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조금 이르거나 늦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이 전쟁책임고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저로서는 결과책임이던지 본의 아니게 복종했다는 식의, 자기의 책임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가치규범의 근간을 좌우하고 때로는 국가와의 대립도 불사해야 할 종교 본래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니시야마 토시히코 신부는 후일 본인의 부친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2005년도에 알게 된 후,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합사한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에 비추어 인간을 신으로 예배하는 야스쿠니신사의 방식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에 합사 취소청구를 했으나 야스쿠니신사로부터 거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전부 패소로 끝났습니다. 역대 수상의 공식 참배로 일본 국내에서 위헌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고, 아시아 각국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의 문제는, 위헌적 합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 기독교 교회와 신앙의 견지에서 도저히 양립을 용납할 수 없는 선교적 장벽임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일본 프로테스탄트 교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본기독교단의 내부의 임중한 지적을 소개합니다. 일본기독교단의 오사카교구 의장을 역임한 히라야마 타케히데(平山武秀) 목사의 글입니다.

〈대동아전쟁에 협력한 교단〉

나는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을 다음 3가지 점에서 이해하고 싶다.

1. 일본기독교단의 성립

먼저 첫번째는 일본기독교단의 성립 그 자체이다. 1899년 이래 여러차례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폐안되었던 “종교단체법”이 마침내 1939년에 통과된다. 이는 국내 모든 종교단체를 전시체제로 편입시켜서 적극적인 전쟁 협력으로 끌고가려는 법률이었다. 이런 분명한 의도를 갖고 국가는 교회수 50 이상, 신도수 5천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 각 교단을 압박했다. 각 교회를 가능한 한 통합해서 국가가 관리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 종교단체법에 따라 일본 내 30여개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합동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본기독교단”이다. 전쟁을 향한 “국민정신총동원”정책에 굴복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 존재 자체가 전쟁책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 전쟁협력의 실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일본기독교단이기에 그 후 4년간 보인 전쟁협력의 실태는 정말 보기 역겹다. 전형적인 예로 교단 성립 직후에 발표한 “전시포교방침”의 강령에서 “국가의 대의에 철두철미하고, 대동아전쟁의 목적 완수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 실천항목을 보면, ‘총군애국 정신의 자양에 힘써, 신도로서 멸사봉공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무렵 교단의 최고 책임자 2명이 이세신궁을 참배했고, 군용기봉헌 운동을 전개했다. 대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의 흐름에 편승해 조선반도와 타이완,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까지 일본기독교단의 전쟁협력의 움직임이 대동아공영권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1944년에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대동아공영권의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냈는데, 일본이 별이고 있는 이 전쟁은 동아 여러 민족의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며,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제국의 전쟁을 신앙으로 함께 싸워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시아 기독교의 정점에 서서 패권을 행사하는 오만한 태도이자, 일본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가장 극에 달한 것은 패색이 짙어진 1944년에 발표한 '일본기독교단 결전체제선언'이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4년, 전쟁 국면은 이제 결전 단계에 돌입했다... 황국의 철저한 승리를 위해 신도의 총력을 봉헌하기 바란다는 말로 맺고 있다.

3. 전쟁책임의 문제

이처럼 2차 세계대전에 앞장서 협력한 일본기독교단의 책임은 전쟁 후 과연 어떻게 규명되었을까?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8일, 교단 최고 대표자가 전국 교회에 보낸 통달문 중에 “성단(천황의 결단)이 한차례 내려져... 본교단의 교역자와 신도는 이 성지(천황의 생각)를 받들어 국체호지의 일념에 철저하여 각자 신앙에 힘써 총력으로 장래의 국력 재흥에 힘을 기울여 이로써 성려(천황의 염려)에 응답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전쟁이 막을 내린지 13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개칸스러운 내용이다. 일본기독교단의 본격적인 입장 표명은 1967년에 당시의 총회 의장인 스즈키 마사히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제2차 대전하 일본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약칭 '전쟁책임고백')이다. 내용과 표현에 부족함은 있지만 사회 일반을 향한 공식적인 표명이었고, 이후 기독교를 넘어 일본의종교 단체에 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전쟁책임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그 전쟁의 책임을 스스로의 문제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느냐를 하느님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 전후의 세월 속에서 그동안 교단으로서, 혹은 개별 교회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진지하게 참여해 온 미일안보문제, 미군기지문제, 오키나와문제, 야스쿠니신사문제, 반전평화문제, 헌법9조를 지키기 위한 운동 등 모두가 이 '전쟁책임고백'이 통렬한 자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제가 속한 성공회의 전쟁책임고백은 매우 늦은 시기에 채택되었습니다.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고백 선언이 1967년이었는데, 일본성공회의 경우 전후 50년을 맞이한 1995년에 선교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 결과로 다음해 1996년의 총회 결의로 “일본성공회의 전쟁책임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10여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교단 내부에서 반발과 저항과 비난의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 자체가 어떤 죄를 고백하는지를 적시하고 있기에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일본 성공회는 전후 50년을 맞이하는 지금, 전쟁 전과 전시하에서 일본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지지하거나 묵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1945년 일본 성공회는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여러 지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전기에 섰습니다. 그 해의 임시 총회 고시에서 사사키 진지 주교는 전쟁 중의 교회의 반성을 말하면서 "국책에 영합"하여 "교회의 사명을 망각"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 총회도 주교회도, 교구와 개별 교회도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일본이 침략 지배한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한 화해의 관계를 신앙공동체로서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일본 성공회는 설립 이후 복음에 반하는 천황제 국가의 국체 사상과 군국주의에 계속 타협하며 강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성공회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성공회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관현의 압박으로 신앙의 싸움을 경험한 교역자와 신도도 있었지만, 그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서는 태도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교제를 갖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침략 전쟁으로 인한 가해자로서의 국가의 모습에 눈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사변 특별기원식", "대동아전쟁 특별기도회" 등을 개최하여, 타민족 지배와 전쟁 협력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긍정하고 교세의 확장과 체제 유지만을 목표로 한 닫힌 교회에 머물어, 주님의 복음이 가르치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일본 성공회는 패전 후 바로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것과 전후 50년 동안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지 않고 화해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사람들에게 사죄합니다.

전후 일본 성공회는 1947년 제22총회에서 1938년판의 공동기도서를 그대로 정본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기도서에는 천황의 지배를 하느님의 거룩한 뜻으로 간주한 "천황을 위한 기도", "기원절(천황계 역사에 의한 일본국 설립일)"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어 1959년에 기도서가 개정되기까지 교리문답에서

"이웃을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천황 폐하와 그 지배에 따라..."라고 가르쳤고, 성찬식 중에 "모든 주권을 지닌 분, 특히 우리 금상 천황을 기념하며"라고 사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전후에도 전쟁 책임을 물어야만 할 천황과 그 국가 체제를 긍정하는 기도서를 계속 사용하고, 스스로의 자세를 자각적으로 바로잡는 일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오키나와 주민 학살과 강제 집단자결, 더욱이 전후 미군 기지의 위협 등 오키나와의 경험은 오키나와 교구를 통해 계속 전해졌고, 1972년에 일본성공회로의 이관을 향해 "역사와 현상을 이해하기 바란다"는 오키나와 교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성공회 전체로서 응답을 게을리 한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일본 성공회는 전후에도 차별적 체질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자각하고 평화의 도구로 세계의 분열과 아픔, 외침과 고통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교회로 변화하도록 기도하며 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회개의 징후로서 다음을 추진해 나갑니다.

(1) 일본성공회의 전쟁 책임 고백을 전 교회가 공유합니다. (2) 일본이 침략한 여러 나라의 교회에 대해 일본성공회의 사과의 뜻을 전달합니다. (3) 역사적 사실의 인식과 복음 이해에 대해 되묻고 심화하기 위한 실천을 각 교구와 교회 안에서 계속해 나갑니다.

일본성공회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공식적으로 한국의 성공회와 선교협력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성인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식과 선교 역사에 관한 검증으로 시작해서, 90년대 이후 청년세미나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 한일협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양국 성공회의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도에는 전쟁 전 재일한국인 장준상 부제가 설립했으나 일본성공회가 외면하고 탄압을 방관했던 오사카교구의 재일한국인 교회인 성가브리엘교회를 재건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재일교포 밀집 거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센타로 이쿠노센터를

설립했고, 오사카교구는 이후 재일한국조선인 특별선교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브리엘교회와 이쿠노센터의 후원은 물론 한일선교 협력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교류협력의 결과로 현재 양국 관구의 협정을 바탕으로 20명의 한국 출신 성직자가 일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올 2월과 3월에는 동경과 서울에서 각각 2. 8 독립선언 100주년기념예배, 3. 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반한 정책에 대해 양국 의장주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80년대에 시작한 한일교류와 1995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와 전쟁책임고백 아래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작게나마 그 일에 관여하고 있음도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리면서도 한편 아직도 일본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 개의 제이로 인해 갈등하고 방황하며, 때로 세상의 여론에 설득당하고 삼켜져서 기독교 신앙과 함께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혐오와 윤리적 불가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실례를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교회를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가 도왔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바른 역사 이해와 실천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관련 자료 소개】

한일 분쟁, 기독교단체의 반응

“한일 기독교단체 “日 수출규제 철회, 평화헌법 수호 촉구”” KBS, 2019. 07. 1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197&ref=A>

한일 분쟁 이해

“알기 쉬운 한일 분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 08. 01.

<https://cemk.org/13969/>

일본 내 기독교의 움직임

“한·일 갈등 속 기독교의 역할” 유코리아뉴스, 2019. 08. 05.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5>

한일 분쟁 인식 평가

“한일 분쟁 정부 대응 긍정, 부정 평가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2019. 08. 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week1&wr_id=79

일본 기독교 이해

“교회사로 세상보기 - 일본 기독교” 팟캐스트 한국 기독교사 툽아보기,

2019. 08. 26.

<http://www.podbbang.com/ch/13184>



기사연 소식

기사연포럼

“민주화 이후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민중인가, 시민인가?”

일 시: 2019. 9. 26 (목) 오후 7시

장 소: 기사연 이제홀

발 제: 이병성 박사

(연세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논 찬: 이상철 박사(크리스찬아카데미)

기사연포럼

“미디어와 도시: 기독교적 성찰”

일 시: 2019. 11. 14 (목) 오후 7시

장 소: 기사연 이제홀

발 제: 김용찬 교수 (연세대학교)

논 찬: 박진규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기사연 아카데미 1

“현대 정치철학 세미나: 광장과 기독교”

일 시: 10월 4 ~ 25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장 소: 기사연 이제홀

대 상: 목회자 및 신학생, 관심자 누구나

수강료: 전체 3만원

(부분 수강 가능. 1주에 1만원)

강 사: 이병성 박사

(연세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공동포럼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을 논(論)하다”

공동주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x 도시공동체연구소

일 시: 2019. 10. 17 (목) 오후 4시-6시

장 소: 기독교회관 조에홀

강 연: 김창환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패널: 성석환 교수(장신대학교),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사연 아카데미 2

“도시와 신학: 공공신학 관점으로”

일 시: 10월 14일 ~ 10월 21일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장 소: 기사연 이제홀

대상: 목회자 및 신학생, 관심자 누구나

수강료: 전체 3만원

(부분 수강 가능. 1주에 1만원)

강 사: 김승환 박사 (장신대학교)

2019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학술세미나

일 시: 2019. 10. 31 (목) 오후 2시-5시

장 소: 프레스센터

기사연 연구사업 후원계좌: 신한 100-025-1538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